

# “트럼프發 日 산업 대전환 우리기업의 새 협력 기회”

## 강경성 코트라 사장

日 공급망 재편, 교역 안정화 전략  
산업 협력 확대, 글로벌 진출 지원

강경성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사장은 18일 “일본의 첨단산업화와 공급망 재편 가속화를 우리 기업의 새로운 협력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강 사장은 이날 일본 오사카무역관에서 일본지역 무역투자확대 전략회의를 주재하며 이 같이 강조했다. 회의에는 일본지역본부 4개 무역관장들이 참석했으며, 한-일간 통상·공급망 현안을 집중 점검하고, 수출·투자유치 및 기업 진출 기회를 모색했다.

전 세계 4위 경제대국인 일본은 한국에게는 4대 교역국으로, 2023년 초 수출규제 해제 이후로는 775억달러 이상의 양국 교역이 안정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강 사장은 무역관장들에게 “미국 신정부 발족 이후 심화되는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속에서 양국 협력을 기반으로, 통상현안 해결 및 공급망 구축 강화는 물론 경제 규모 확대, 산업 고부가가치화를 이뤄낸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 강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코트라는 특히 미국 트럼프 2기 정책에 따른 경제안보, 공급망 위기 대응을 위해 양국 경제협력 확대에 나선다.

트럼프 관세정책에 일본은 자동차, 반도체 등 주요 산업 분야에서 공급망 불안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다.

특히, 미국이 일본 자동차, 반도체 산업에 25% 관세 부과를 예고하고 중국과의 기술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일본 내 공급망 재편 가속화가 예상된다.

이에 코트라는 공급망 재편에 따른 기회 발굴을 위해 핵심 기술·부품 연계형 양방향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리 기업의 대일 수출을 위한 상



강경성 코트라사장이 18일 일본 오사카무역관에서 ‘일본지역 무역투자확대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코트라

담회를 원자재 및 기술협력 수요 발굴을 위한 장으로 확대해 추진하겠다는 전략이다.

나아가 일본 종합상사와의 협업을 통해 수입처 다변화를 모색하고, 제3국 공동 진출 등 협업 기회도 모색한다.

일본의 산업 대전환에 대응해 소부장·소비재 수출 지원에도 박차를 가한다. 일본은 장기 저장장에서 벗어나기 위한 산업 구조를 전면 개편하고 있고, 특히 자동차 산업 대전환의 기로에 직면해 차세대 첨단 소부장 시장 공략이 이뤄져야 하는 시점이다.

이에 코트라는 일본지역 무역관별 전담 산업을 선정, 해당 무역관이 양국 수요 매칭을 리딩하는 ‘산업 특화 무역관’ 체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지역별로 ▲도쿄 DX·스마트제조 ▲오사카 전력·에너지 ▲나고야 모빌리티 ▲후쿠오카는 반도체 등 유망 산업 수요를 집중 공략한다.

강 사장은 “일본과의 협력은 단순한 교역을 넘어, 공급망 구축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며 “핵심 산업 분야에서 적극적인 대한 투자 유치를 추진하는 동시에, 일본 정부의 스타트업 육성 정책을 활용해 우리 기업의 글로벌 확장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 20여년 전통 ‘국제 물산업 박람회’ 개막

‘안전한 물과 우리의 세상’ 주제  
21일까지 고양 킨텍스서 열려



환경부와 한국상수도협회가 이달 19일부터 21일까지 경기 고양 킨텍스 제2 전시장에서 ‘2025 국제물산업박람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국내 최대 규모의 물산업 전문 전시회이다.

이 행사는 국내 물기업의 우수 제품 및 기술을 세계에 널리 알리는 동시에, 물산업 활성화 촉진을 목적으로 지난 2002년부터 개최돼 왔다. 올해로 22회째를 맞는 국제물산업박람회의 주제는 ‘안전한 물과 우리의 세상’이다. 기후 변화와 물 위기가 일상화된 오늘날 모두가 안전한 물을 누릴 수 있도록 물산업의 시대적 책무를 되새긴다.

이번 박람회엔 585개 전시공간(부스)에 국내 물기업 210개사가 참가해 다양한 물산업 기술과 제품을 소개한다. 특히 정보통신기술과 융합한 스마

트 도시침수 예측 기술, 디지털 하수도 시스템 등 물분야 신기술을 다수 선보일 예정이다.

올해는 기존 상수도 위주의 전시에서 하천관리·물재해예방 관련 기술과 제품으로 구성을 확대했다. 환경부는 내년에도 분야를 지속 확대하여 물순환, 물 재이용, 해수담수화, 초순수 등 미래 유망 신산업을 적극 육성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제물산업박람회에 참가하는 기업과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환경부 물산업 정책방향을 공유하는 각종 토론회(세미나)가 열린다. 특히 올해 박람회 주제와 연계한 물안전 분야 특별 토론회에서는 수도 분야 물 안전 대책이 논의될 예정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 2060년까지 고준위 방폐장 건립 국무총리 소속 유치 지원팀 설치

고준위 방폐물 관리 특별법 의결  
2050년까지 중간저장시설 확보  
부지적합성 조사·주민투표 거쳐야  
유치·주변지역 폭넓은 지원 추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 선정과 유치지역 지원을 위한 절차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내 고준위 방폐장 설치가 본 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제정법률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특별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특별법에서는 중간저장시설 2050년, 처분시설은 2060년까지 확보하겠다는 목표지점을 제시하고, 이를 위해 민주적이고 과학적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선정 절차를 마련했다.

특별법은 부지 선정을 위해 ▲기초자치단체(시·군·구) 신청 후 ▲2단계에 걸친 부지적합성 조사(기본·심층조사) ▲주민투표 등을 거쳐도록 했으며, 관리시설 유치지역과 그 주변지역에 대해 특별지원금을 포함해 폭넓은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제2차 고준위 방폐물 관리 기본계획’(2021년)에 따르면 부지선정을 위한 공모부터 주민투표를 통해 부지를 확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

정하기까지 13년이 소요된다.

아울러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을 설치할 경우 주변지역 의견수렴 절차와 지원방안을 법제화하는 한편, 그 규모를 원자로 설계수명 기간 동안의 발생예측량으로 제한하고, 중간저장시설이 준공되는 즉시 부지 내 저장시설에 보관 중인 사용후핵연료를 이전하도록 명시했다.

유치지역 지원을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유치지역 지원위원회’를 설치해 해당 지자체에 특별지원금을 지급하게 된다.

신설되는 국무총리소속 행정위원회(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업무를 전담하게 되는데, 존속기한인 5년 이내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으로 변경

을 검토할 예정이다.

고준위 방폐물 처분시설의 건설·운영에 필요한 기술개발과 실증을 위한 지하연구시설은 작년 말 연구용 지하연구시설 건설부지로 태백시를 선정해 이미 추진중이다.

이날 특별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산업부는 하위법령인 대통령령 제정을 포함하는 후속조치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특히 법률에서 위임된 의견수렴 절차와 지원방안 등 주요 사안에 대해 전문가·원전지역·이해관계자 및 일반국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대통령령에 반영할 방침이다. 동시에 관리위원회 신설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도 진행할 예정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 “홈플러스 일별 대금지급 현황 매주 점검”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질의서  
한기정 “민원 면밀 모니터링”

홈플러스 회생절차 개시와 관련해 대금지급 시대가 발생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현안질의에서 “공정위는 소상공인 피해 방지를 최우선으로 해 일별 대금지급 현황을 매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홈플러스는 현재 납품업체에 대한 대금은 정상적으로 지급이 가능한 상황”이라며 “이에 따라 홈플러스는 1·2월에 발생한 상거래 대금 중 3400억원을 상환 완료했고, 잔여

대금도 순차 지급할 계획이라고 지난 14일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정위는 납품 업체에 대한 지급 현황 및 소비자피해 등 민원 동향을 면밀히 점검·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구체적으로는 “지난 13일 대금지급 현황과 납품 업체 피해 및 애로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긴급 현장 점검을 실시했고 관련 민원 동향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갑작스런 회생절차 개시로 납품업체 대금이 제대로 지급될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현장 점검 결과 지난 1월 발생한 상거래 채무 3791억원 중 87%인 3322억원이 이미

지급된 것으로 잠정 확인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회생절차 개시 이후 홈플러스가 판매한 상품권 중 10억원가량의 소비자 환불 요청이 있었고 전액 환불된 것으로 확인했다”고 했다.

공정위는 상품권 환불 및 사용 관련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법 위반이 발생할 경우 환불 명령 등 조치를 통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현행 대규모유통업법 상 대금지급기한이 적정한지 검토해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 폴리텍대-로봇산업협, 차세대 로봇기술 인력 양성 맞손

한국폴리텍대학은 18일 오후 인천 부평구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회의실에서 한국로봇산업협회와 ‘로봇 기술 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인공지능(AI) 기반 차세대 로봇 기술 인력 양성 및 취업을 위한 상호 협력 △로봇 분야 산업정보, 기술, 인적·물적 자원에 대한 상호 교류 △기업 맞춤형 로봇

교육 커리큘럼 개발 및 교육환경 조성 등에 힘을 합친다.

폴리텍대는 로봇 기술 교육 노하우를 바탕으로 급성장하는 로봇 산업 인력 양성에 나서고 있다. 2021년 개교한 로봇캠퍼스는 국내 최초 로봇 특성화 대학으로 1회 졸업생 취업률은 83.3%, 유지취업률은 93.9%에 달한다. 무엇보다 졸업생 로봇 관련 업체 취업률은 86%를 상회한다.

이철수 폴리텍대 이사장은 “한국 로봇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발전을 위해 함께 힘을 합쳐 나갈 예정”이라며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실무형 로봇 인재를 키우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폴리텍대는 올해 전국 36개 캠퍼스에서 로봇·자동화계열 4590명(모집 기준)을 양성하며, 하이테크 등 직업교육과정을 이달 21일까지 모집한다.

/세종=한용수 기자